

POLITICS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이재명 ‘파기환송심’ 불출석…조희대 청문회 예고

전남서 힐링 여행 어때요
숙박·체험 등 빅3 할인혜택

전남도가 5월 한 달을 ‘전남 방문의 달’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 총력전에 돌입한 가운데 도·시군에서 준비한 풍성한 즐길거리와 혜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숙박과 체험, 위케이션 상품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빅3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숙박업소 이용료 50% 할인, 위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숙박시설·사무실 이용료 등 50% 할인, 주요 관광지과 체험시설 입장료 1+1 이벤트 등이다.

숙박할인 이벤트는 전남지역의 주소지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 10만 원 이상 결제는 5만원, 7만원 이상은 4만원, 5만 원 이상은 3만원 할인을 제공한다. 전남에서 연 4박을 하면 최대 2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회원은 할인금액에 더해 1박당 1만 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숙박 할인과 체험상품은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앱에서 예약할 수 있다. 위케이션은 ‘전남 블루 위케이션’ 누리집(inworkation.kr)에서 예약할 수 있다.

이달 일선 시·군에서는 21개 축제가 열려 관광객 발길을 붙잡는다.

시군마다 준비한 특별 할인 혜택과 이벤트도 풍성하다. 시군별로 근대역사관 등 50% 할인(목포), 아쿠아플라넷 다자녀 30% 할인(여수), 순천만국가정원·순천만습지 통합권 단체 40% 할인(순천), 영산포 홍어거리 홍어 50%·한우 30% 할인(나주), 우드랜드·천문과학관 등 입장료 50% 할인(장흥), 관내 숙박·식당·카페·특산품 영수증 인증 시 여행경비 지원 등을 통해 방문객이 부담을 덜고 여행을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전남서 초대형 크루즈선 운항
1박 2일 전국 최초 섬 콘텐츠

전남도는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붐업을 위해 초대형 크루즈선을 시범 운항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전남 섬 바다다 크루즈’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중·금·토요일 오후 3시 여수에서 출발해 다음 날 11시까지 1박 2일 동안 금오도, 거문도, 백도 등 전남의 아름다운 섬을 항해하는 전국 최초 섬 크루즈 여행이다.

첫째 날에는 금오도, 안도, 연도, 백야도, 개도, 제도 등 다도에 섬 경관의 색다른 매력을 제공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맞는 노을,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야경과 별밤 감상, 불꽃놀이, 선상포차, 디너뷔페, 오션뷰 객실 등 크루즈 서비스를 한다.

둘째 날 항일암 앞바다 해돋이 포인트로 이동, 다도해의 일출을 감상한 뒤 전남의 아름다운 섬인 나로도, 금강도, 거문도, 백도 등을 경유한다. 구체적인 운항 일정은 기상 상황, 항로 사정 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크루즈 투어에 참여한 관광객은 여행과 리조트가 결합한 국내 유일의 섬 크루즈 여행을 체험할 수 있다.

이번 전남 섬 바다다 크루즈선은 2만 2천6급 팬스타드림호다. 총 115개 객실을 비롯해 편의점, 사우나, 마사지룸, 노래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스탠다드룸부터 로얄 스위트룸까지 다양한 객실이 있으며, 디너뷔페와 조식을 무료 제공한다. 이현규 기자 gnews1@

민주 “공식 선거운동 전 11일까지 재판 연기하라”
탄핵카드 등 고강도 압박…서울고법, 15일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재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 밤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며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 극우 내란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방안은 물론, 청문회·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대책을 거론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면 모든 대응 수단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 범법지원단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고 집행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장인 정경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별도로 심리할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를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앞서 지난 1일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발언 중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았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도교통부가 허위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우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지만, 이 후보 측은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근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명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거법률지원부단장은 이날 MBC 라디오와 의 전화 연결에서 첫 재판 출석 여부에 대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공직선거법에 후보 선거 기간 중에는 체포도 구속도 안 되고 병역도 연기된다고 나와 있을 정도로 권리가 보장된다”며 “지금 법원이 재판 5개를 잡아두고 있는데 명백히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응할 수는 없는 일인 것 같고 당연히 반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 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송 정재오)에서 진행됐다. 이

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의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당초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는 등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관련 서류 송달 절차

차에 소극적으로 응하거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선을 32일 앞둔 가운데,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린다.

6월 3일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李, 조봉암·DJ 거론…“반드시 살아 새 나라 만들 것”

파기환송 뒤 직접 입장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최근 대법원이 자신의 공식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특히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 죽은 사람도 있

고 산 사람도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어떤 분이 저를 붙잡고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것이 있다. 과거 제가 (피소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으려면 죽일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대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 그제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며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이 후보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을 거론하며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북문제나 정치적 대립, 정치적 이유로 그 분이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충북 옥천군을 찾아 전통시장 앞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기가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다. 제가 어릴 때를 돌아보면 참 인상이 좋았던 분 같은데, 문세광씨에게 살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며 “정치적 이유로 누군가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대결하는 세상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균형발전’ 한 목소리

경남 창원서 협력회의…지역현안 대선공약 반영 촉구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과 솔라시도 AI 신도시 조성 등 시도별 정책을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광주와 전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는 1일 경남 창원에서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등의 2차 지방이전, 비수도권 대상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지역개발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강력 촉구했다.

또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발전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및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시·도 간 연계발전과제와 시·도별 현안과제도 공동성명서에 포함해 대선 공약 반영을 건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과 비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위해 영호남이 하나되자”고 제안한 뒤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추진과 정부 기관의 지역 분산 배치를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공동성명서는 영호남 8개 시·도가 새 정부를 향해 지방정

부의 목소리를 각인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영호남 변연에 날개를 달아줄 두 가지 핵심사업인 ‘남해안 발전 특별법’ 제정과 ‘달빛내륙철도’ 추진에 모두 힘을 모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전남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시·도지사가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 등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1998년 출범한 이후 올해로 28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또 김영록 지사를 차기 영·호남 협력회의 의장으로 선임됐다. 앞으로 ‘남부권 경제공동체’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영·호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겠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민형배 ‘대통령 임기 중 재판정지법’ 대표발의
재직 중 공판절차 정지 명문화…법적 불확실성 해소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전문가(OLC)는 지난 1973년, 2000년 및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기소 및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한 바 있다. 또 프랑스는 2007년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은 임기 중 출석요구, 제소, 취조, 예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헌법상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그 자위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해석상 논란에 종결을 짓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김문수는 바지후보…한덕수 추대 사기극”

민주당, 국힘 내용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이 공식 대선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선출한 후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내용을 쥐는 것을 겨냥해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바지 후보”를 뽑아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충북 영동 방문 도중 기자들을 만나 “선거라는 것은 특정한 정치집단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게 통상적 모습이지 않나”라며 “요즘은 이상하게 변해서, 제가 경쟁해야 할 주요 진영(국민의힘)은 후보를 뽑자마자 또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바지 후보”를 뽑아 명분도 없는 단일화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 사기극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